

# “司試 존폐 갈등 4년 더 이어질라” 비판 잇따라

## 사법시험 4년 연장...법조계·학계 등 반응

### 로스쿨 학생들 “총 자퇴 운동 전개”...변협은 일단 환영 법대교수 “투트랙 필요”...정치권 신중론 속 “의견 수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법무부가 4년 더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자 사시 존치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논란만 4년 더 이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 떠쓰는 자들이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법무부의 입장에 유감”이라며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겠느냐.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자퇴밖에 없는 것 같다. ‘총 자퇴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경솔한 입장표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법시험 존치 입장만 고수하며 전방위적 입법로비를 했다”며 “하장우 대한변협 회장의 직무정지

처분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협과 전국법학대학교수회는 환영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뜻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법시험 존치다.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법시험”이라며 “법무부가 시험 존치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학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게 답이다. ‘투 트랙’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한다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최중업 조선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문 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한데서 나온 방안이다. 급수저 논란을 일으킬 만큼 로스쿨은 문제점이 많다”며 “10년동안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이완해 해 어떤 것이 우수

법률가 양성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학장은 또 “국민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면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돌 비하여 사법시험을 존속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 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

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야는 신중론 속에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사시존치 유예 결정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환영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 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 현명한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협뉴스

## 여친 폭행 의전원생

### 조선대, 제적 처리 확정

여친잔구를 감금·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광주일보 3일자 6면>이 최종적으로 제적 처리됐다.

조선대는 의전원 학생 박모(33)씨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제적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대 의전원은 지난 1일 학생지도위원회 회를 열어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라는 학칙을 적용해 박씨를 제적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박씨에게 감금형의를 추가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상해죄만 적용해 기소했고, 박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재판에 항소함에 따라 박씨는 2심에서 상해·감금죄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여중업원 뇌사 유증주점 경찰·공무원 성매수 의혹”

### 광주·전남 여성단체들 제기

‘여수 유증주점 여성종업원 뇌사사건’ <광주일보 1일자 6면>과 관련해 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이 여수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여성단체들은 유증주점 성매수자 중에 지역 경찰과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등 광주·전남 지역 44개 여성·인권단체는 3일 오후 여수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유증주점 여성종업원 뇌사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사 초기부터 업주의 폭력 상황을 경찰에 설명했지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진행해온 여수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업주의 말만 듣고 단순한 개인적인 사고로 처리한 것은 축소·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성매수자들 중에는 경찰과 지역사회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성매수행위를 하는 경찰이 업주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 사건을 제외한 유증업소 동료 종업원 9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30일 ‘여수 시 학동의 한 유증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강모(여·34)씨가 이 업소의 업자인 박모(여·43)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동료 여성종업원 9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대학 도서관은 열공중 기말고사를 앞둔 전남대 학생들이 3일 전남대 백도(도서관) 5열람실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전남대 도서관차위원회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백도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누리에산 우회지원 수용 못해...예산 반납할 것”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시설비 명목 뺄뺄처방 안돼”

국회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우회 지원키로 하는 ‘뺄뺄’ 식 처방에 시·도 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으로 내려준 만큼 시설비로 쓴다거나 편성하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측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누리과정 사업비로 2조1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작 3000억원으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시·도 교육청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

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른 만큼 부족한 1억8000여억원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합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내려주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아닌 시설비 지원에 쓸 것”이라며 “편성하지 않을 경우 반납하러면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민중대회 집회 금지 부당” 판결

법원이 이날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28일 집회는 이번 집회와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협뉴스

## 광주지검 내년 총선 대비

### 특별 현장 단속반 운영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내년 4월 열리는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특별 현장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에서 내년 총선 조기 과열 양상이 엿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반은 수사과·공안수사지원팀 수사관 1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사관의 주거지와 연고지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상시적으로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지검 소속 직원이 퇴근 뒤 자신의 생활 근거지에서 지역 선거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서성호 공안부장검사는 “특히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단속 활동과 정보 수집이 단속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구청·구의원 공문서 원본 반납 신경전

○~광주시 광산구와 구의원이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 원본 반납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경전.

○~3일 광산구에 따르면 A 구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정산 서류 원본 중 일부인 11건(3300매)을 1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광주지검에 고발.

○~이에 대해 A 구의원은 “보조금 적정 지급·사용 여부를 보려고 자료 사본을 요구했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원본이니 반납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해 원본인 줄 몰랐다”며 “지난 8월에서야 갑자기 반납하라고 공문을 보내와 보관하고 있던 자료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라고 설명.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질권대출, NPL 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거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거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거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